"입학하는 아이가 걱정이네요" "입학식은 하나요?" "발열 체크, 소독은 꼭…"

개학 열흘 전… '코로나19'가 부른 불안심리

도교육청, '정상 개학' 공문… '교실 입학식' 이어질 듯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김진희(40)씨는 걱정이 많다. 3월 입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탓이다. 제주에는 아직 감염 확진자가 없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를 놓긴 어렵다.

김씨는 "아이를 입학시키는 부모 입장에선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다"며 "등하교 시에 발열을 체크하고 소독을 필수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새 학기 분위기도 바꿔놓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덜기 위해 '교실 입학식'을 준비하거나 방역을 강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쁘게 3월을 맞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191곳 모두 개학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도교육청은 제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검토해 지난 18일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정상 개학'을 준비하도록 안내했다.

현재대로라면 대부분의 학교가 3월 2일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 제주시내 초등학교 10곳에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가 이날 개학과 함께 입학식을 진행한다.

하지만 신학기를 앞둔 마음은 편치 않다. 코로나19 사태에 예정대로 입학식을 진행할지 묻는 학부모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남초, 한라초 등 일부 학교에선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같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아닌 교실에서 입학식을 열기로 했다.

한라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을) 연기할 것인지 묻는 문의가 있었다"며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부모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되, 교내 방송을 통해 각 학급 교실에서 입학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은 학생 맞이를 위한 방역으로 분주하다. 제주도교육청은 개학을 앞둔 오는 26~27일 도내 모든 학교를 지도 점검해 코로나19 차단에 나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차후 상황에 따라 개학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진 정상 개학을 준비하도록 학교에 안내했다"며 "방역물품을 확충하고 일시적 관찰실을 마련하는 등 학교별 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제주대 코로나19 입장문 "학교, 감염증 방지 최선"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의 걱정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우리 대학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번 입장문에서 개강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하는 것과 관련 "유학생들의 동선과 거주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로 들어올 때 1차적으로 발열 확인과 문진을 통해 입도를 결정한 뒤 제주대에서 2차 발열 검사를 거쳐 독립된 학생생활관으로 입소시키면 잠복가능기간인 2주 동안 1인실에서 집중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라산 만설과 하귤 기습 한파가 물러간 19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에서 바라본 눈 덮인 한라산과 노랗게 익은 하귤이 남국 제주의 정취를 한껏 자아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4·3유족회,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 "법 개정 적극적 협력할것"

4·3 특별법 개정안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 "4·3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 여당이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에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 저라도 나서겠다"며 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국회를 찾아 이 위원장과 한시간 넘게 면담을 가졌다. 이 위원장과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행안위에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해 정부·여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4·3의 아픔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절대 저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이 4·3 해결에 소극적이지 않다"며 "배보상을 위해서는 기재부가 동의하고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 법 개정을 야당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유족들이 야당을 찾아올만큼 그동안 정부 여당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사를 설득해 법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에 대해 "유족들이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사법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전지훈련 메카 서귀포 '코로나19' 유탄

이달 예정됐던 축구 등 10개팀 훈련 취소
도쿄올림픽 베이스캠프도 현재 1팀만 확정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며 서귀포시의 겨울철 전지훈련 유치 특수도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훈련단의 경우 선수단 외에 학부모들도 함께 찾으면서 지역경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2월 서귀포에서 전지훈련을 계획했던 여러 국내외팀이 취소했기 때문이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8개 종목에서 597개팀(1만4802명)이 전지훈련을 마쳤고, 현재 9개 종목에서 102명의 선수가 훈련중이다. 하지만 2월 전지훈련 예정이던 중국의 4개 축구팀(200여명)과 부산 아이파크, 여자축구 U-18 국가대표 등 10개팀(373명)이 코로나19 여파로 전지훈련을 취소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서귀포서 개최 예정으로 80개팀 3000여명의 선수단과 부모가 찾을 예정이던 칠십리 유소년 축구대회가 취소됐고, 20개팀(1430명)이 참가예정이던 수애기배 수영대회는 오는 4월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서귀포시가 일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2~6월에 유치를 추진중인 올림픽 본선 참가팀의 베이스캠프 유치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림픽 본선 참가팀 중 서귀포시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기로 확정된 팀은 스위스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팀(1명) 뿐이고, 네덜란드 여자축구 국가대표팀과 한국 수영 국가대표팀과는 협의중인 상태다. 6월 예정된 대한민국 남자 올림픽 축구대표팀 평가전은 작년 10월 대한축구협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현재 서귀포시를 포함한 3곳이 유치전에 나서면서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점을 살려 도쿄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전에 나서는 등 훈련지로서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2월 서귀포에서의 전지훈련을 취소한 팀도 있지만 육지부 대회 취소로 제주에서 추가로 전지훈련을 하려는 팀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달부터 도쿄올림픽 참가팀들이 베이스캠프를 서귀포시에 차릴 수 있도록 유치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농기원 근무시간중 외부강연 '눈총'

도감사위 감사결과 발표
3년간 106회 외부 강의
10명 대상 신분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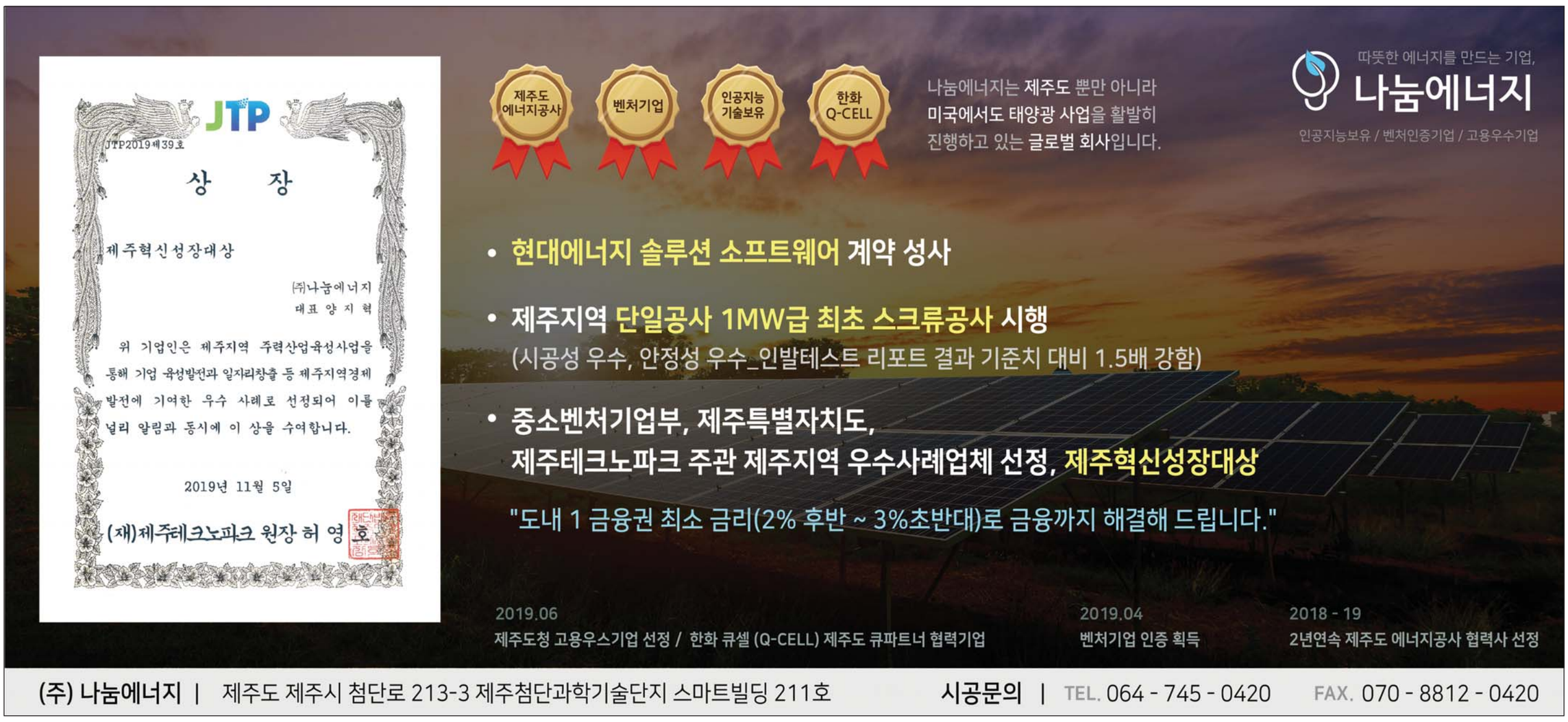
제주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외부강연에 나가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가 이뤄진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로, 분야는 예산·회계, 계약, 안전, 시설공사, 연구·검사·기술지도 등이다.

감사 결과 26건(시정 7건·주의 10건·권고 1건·통보 7건·모범사례 1건)의 행정상 조치, 10명(훈계 2명·주의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건(감액·회수 1억4004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직원 17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106회(264.5시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에 나섰는데도 연가 등을 받지 않았다. 이 중 일부 직원들은 강의수당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6월 연구단지 조성 기반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총 1억3488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토공량이 설계물량보다 적게 시공·준공됐는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51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위원회는 절감할 수 있었던 1억3488만원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치, 과다 지급된 공사비 516만원을 회수하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 감사위는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보조사업 지도·점검 소홀 등의 사항을 적발했다. 송은범기자